

데스크 시각



김 대 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농어촌 기본소득 '희망의 실험' 되려면

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경제에게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 달리 전 주민에게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규모를 선정한 뒤 균형별로 1~4%까지 유입 인구가 늘었다"라고 밝힌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범사업 시행을 고려해 두고 정부와 시범 지역에 있는 광역지자체 간 예산 분담 등을 놓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국회가 기조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대 의견을 불이면서 촉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 보류 검토'라는 의견을 달았는데,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분담률 상향으로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금액은 총 9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9억 원(분담률 18%)을 분담해야 했던 전남은 36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충북과 전북, 경남, 강원 등도 각각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일부 도에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반영은 불가하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남도 역시 내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분담률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추후 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 배정에서 논란이 여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존 농업·복지 예산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농민들의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아랫들을 빼서 윗들을 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베 경영안정대책 비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수료에 미친다'는 평가를 했던 것이다.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선정된 전국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의 지역자

당 확대 지원과 산값 회복 상황,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라며 진위를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인 탓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형태와 사용처, 사용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준비가 부족해 자칫 지급이 늦어지거나 시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용처 확대 등을 각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줄속 추진은 정책 불신만 키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안이 그어야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와 재정 지속 가능성,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재정 분담률 논란에서 봤듯이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세밀한 논의의 없이 당위적으로 밀어붙여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취지 자체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줄속 추진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이라면 국가가 그 실패의 비용까지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반면교사 할 필요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자체와의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비 비율 확대와 도비 부담률의 현실적 조정 없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희망의 실험'이 아니라 '무책임한 실험'으로 기록될 것이다.

분담률·예산 시작도 전에 '빼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자체는 어쩔 수 없이 농민수당 등 기준에 지급하던 농업·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갈등만 앙상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들 정도다.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선정된 전국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의 지역자

온펜칼럼



박 상 하
사회경제연구원장

정년 연장, 3자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 2023년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혁(정년 62~64세)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 직전 야간에 헌법 49.3조를 발동해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여기엔 20년 후 연금기금 파산을 막기 위한 우려와 경고 때문이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생산 가능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폭스바겐, 지멘스 등 대기업 경영진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비밀 협의로 정년을 67세까지 밀어붙인 경우다. 그래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격차 때문에 어느 쪽에 정년 기준을 맞출지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동독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동독 주민의 정년 연장에 대한 예외적 조기퇴직 혜택을 확대하거나 산업체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대기업의 반대는 적었지만 중소기업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일본 중소기업들은 고령 노동자 임금이 높아 부담이 커다며 정년 연장을 곧 폐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대신 '계속 고용 의무(연금 수령 나이까지 계속 일자리 제공)' 형태로 우회적인 정책을 선택하였다. 정치적 반발을 피하고자 정부 발표에서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선택적 계속 고용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년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용어는 슬기 것이다.

스웨덴은 노조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나라여서 정년 연장 과정에서 노조가 정부의 숨은 파트너 역할을 한 사례다. 노조가 정부보다 먼저 정년을 67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제안한 경우다. 이유는 국민연금 제

도가 기여형이어서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노조와 정부가 밀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나라마다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 재정 정부의 공약인 65세 정년 연장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5일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급도입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우리는 유럽처럼 청년에게 일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고령자가 빨리 은퇴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문화가 정착된 것도 아니며, 일본처럼 연금 개혁과 계속 고용 의무화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기업에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직무 조정을 기업 자체에 맡겨 후회하는 경험과 노력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3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재정 보증자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 연금 개혁과 연동하여 청년 고용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가장 양보하는 처지에 서야한다.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직무 대설계와 고령자 전용 직무, 저강도 전문직 분리와 청년 채용 행정, 근로 시간 유연화와 선택 근무 확대 등이 요구된다. 노동자는 임금과 직무 변화 수용 및 세대 간 이해 조정 역할과 함께 청년 세대와의 고용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 보호 중심 전략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3자의 고민과 합의를 담보하는 것이 온전한 정년 연장의 해법이 될 것이다.

기 고



김 한 호
수필가·문학평론가

순천만 철새

기쁜 것이 계기가 됐다. 2002년에 고향으로 돌려보냈더니 그해 겨울에 더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왔다. 정성 어린 보살핌이 해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의 흑두루미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순천만은 2006년 탑사르 습지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로 등재되었다. 순천만 갯벌은 동천과 이사천 두 물줄기가 만나 남해로 흘러드는 어귀에 22.6㎢의 드넓은 갯벌과 국내에서 가장 넓은 5.4㎢의 갈대숲이 아름다운 수목화처럼 펼쳐져 있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퇴적 지형으로 무성한 갈대숲이 있어 철새들의 은신처이며 보금 자리가 되고 있다. 또한 갯벌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유기물과 플랑크톤을 공급하여 철새들의 먹이인 갯지렁이, 꽁꽁이, 칠개, 낙제, 조개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사는 철새들의 낙원이다.

지난주, 나는 겨울 철새와 흑두루미를 만나러 순천만을 찾았다. 순천만 습지 정문 맞은편 산자락에 있는 'O O 갤러리' 카페는 철새들이 노니는 들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벼를 수확한 들판에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떼 지어 우짖는 소리가 자연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곳에서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일제히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펼치는 군무는 참으로 경이로운 경관이었다. 새는 철새와 철새, 나그네새가 있으며, 현재 지구상

에는 1만 100여 종 500억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다. 순천만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철새는 흑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가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황새, 노랑부리백로와 II급인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갈매기, 매가 살고 있다.

흑두루미는 10월 중순경에 시베리아 동부에서 2300km를 28일간 날아와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다 이듬해 3월에 번식지로 떠나간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 철새 중 민물가마우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뿐눈병아리 등은 떠나지 않고 턱새처럼 살고 있다.

조류는 동물 천연기념물 가운데 47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을 잡아먹거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고 씨앗을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는 자연 생태계의 이로운 존재다. 그러므로 새를 보호하는 일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이다.

순천시는 철새들을 위해 전복대를 뽑고 철새 월동농 경지를 전환경 능력으로 가꾸어 오염되지 않은 먹이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순천만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자원이며 철새를 관찰하며 생태계 보전 인식을 일깨우는 천혜의 자연학습장이다. 이 아름다운 갯벌이 영원히 철새의 암석처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社說

12·29 참사 국조특위가 밝혀야 할 5대 과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1년 이다. 대 기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조사위)의 조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으로 참사 원인 규명 등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꾸리고 1월 30일까지 40일간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사고 조사와 직 접 담당했던 항철조사위 사무국장과 조사 담당 등 핵심 인원 23명을 차택해 청문회를 갖고 현장 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게 된다.

국조특위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섯 가지다. 무엇보다도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목표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적절했는지와 이 위험성이 실제 참사를 유발했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엔진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무안공항의 시설 문제도 점검해야 하는데 핵심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둑덕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 아 함에도 콘크리트 둑으로 조성된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시정 권고한데서 알 수 있듯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시설임이 확인됐다.

참사 후 1년 가까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철조사위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축소나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이제서야 로컬라이저의 안전기준 위반을 지적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비약한 사고 조사 의지를 반증한다. 특히 항철조사위는 밀실 조사에 이어 줄속 발표를 하려다 유가족들의 불신을 키웠다.

여야 힘을 모아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만큼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일그리진 상아탑...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광주·전남 대학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상아탑에서 교수 갑질로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고 교수들의 뇌물수수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이번에는 폐과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른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별급형을 선고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을 당해 학과가 문닫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단답지를 대신 작성해 채점한 뒤 교무처에 제출한 혐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이 성적을 조작한 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함께 적발됐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로부터 입학 생 유치와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은 점을 감안해 별급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의 한 사립대학이 기자 학생을 만들고 편법 전과를 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

학과 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한 대학의 책임은 더 무겁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자연스런 구조조정은 생태계를 맑게 하는 정화작용을 한다. 정부는 '좀비 대학'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혈류를 끊어야 한다. 일그리진 상아탑의 모습을 디는 보고 싶지 않다.

無等鼓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내 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온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카렐을 듣기는 힘들지만 곳곳에 반짝이는 LED 조명을 단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안에는 즐거움 뿐 아니라 '평안의 있기를', "빛이 함께하기를"

같은 축복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 크리스마스 인사는 즐거움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알아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올 한해도 잘 버텨왔다는 것, 내가 아직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말없이 인정해주는 인사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반짝이는 불빛보다 그나마 있던 시간을, 크리스마스 인사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한 번쯤 떠올려도 좋겠다. 반짝여도 좋고, 조용해도 좋다. 각자의 속도로 한해를 건너온 모두에게 오늘만큼은 평안이 있기를,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기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성탄의 풍경

The Kwanju Ilbo	

<tbl_r cells="2" ix="